



해외농약뉴스

미국정부 식품안전법 개정안 승인 델라니조항 폐지 '합리적 확실성' 도입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그 동안의 미국농약규제에 커다란 변화를 줄 법 개정에 승인했다.

이 법은 37년간 시행되어온 델라니 조항을 폐지하고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농약잔류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단일위험기준을 정하게 된다. 이것은 농약 재등록 프로그램이 1988년 FIFRA법에 제정된 이래 첫 번째 주요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델라니 조항에 있는 제로(0) 발암성 위험기준을 "해가 없는 합리적 확실성"으로 정의되는 기준으로 바꾸게 된다. 또한 유아식의 농약잔류 위험성에 대한 특별권고 사항과 대중의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치의 국제적인 단일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새 법하에서 EPA는 현재의 모든 농약의 잔류허용치를 향후 10년간에 걸쳐 새로운 규정에 맞게 검토하게 된다. 또한 재등록 프로그램이 진행중인 일부 농약에 대해서도 잔류허용치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며, 이미 검토가 끝난 재등록 농약은 맨마지막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법의 "해가 없는 합리적 확실성"의 기준은 피해를 주지않는 수준(예로 암)이나 피해를 주는 수준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모두 포함하며,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은 무시할만한 것 또는 백만명중의 한명이 암에 걸릴 확률로 정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라 농약잔류 허용치를 설정할 때 EPA는 에스트로젠(여성 호르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에스트로젠의 영향에 대한 특별참고서를 만들게 된다. 이밖에도 EPA는 잔류허용기준을 포함, 농약의 위해성과 유익성에 대한 책자도 만들게 된다.

영국 - 포장지 회수에 업계부담 가중 50% 회수 EU목표따라 새규정 마련중

영국의 농약업계는 포장지 폐기물을 회수하기 위한 정부 규정의 시행으로 경영상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7월 11일 영국농약협회(BAA)는 영국정부의 규정초안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어려움중의 하나는 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 포장에 대한 막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영국정부는 유럽연합(EU)이 제정한 '포장과 포장폐기물 지침(94/62)'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새 규정하에서 영국회사들은 생산한 포장폐기물의 일정비율을 회수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영국에서의 포장회수는 유통체계에 따라 분담될 예정인데 회수목표 50%중에서 포장자재회사가 6%, 포장지 제조회사가 11%, 포장자(농약생산자) 36%, 도매·공급업자가 47%의 회수부담을 지게된다. 이렇게 되면 농약생산업자들이 전체의 18%를, 판매업자들은 23.5%를 부담하는 셈이 된다.

수출제품의 포장의무에서 면제되는 수출업자보다는 수입업자가 더 부담이 많다.

회사들은 비용분담을 위해 환경당국에 등록해야하고 그들이 취급하는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기타로 구분된 포장과 그들이 공급, 수·출입, 판매량에 대한 광범위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회사들은 또한 표준산업-광범위 계획인 Valpak같은 회수기구에 가입할 선택권도 있지만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 규정의 초안에 대해 10월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금년말경 시행할 방침이다.



해외농약뉴스

니찌멘 - 유럽농약시장 기반강화에 성공 프랑스 다리아그룹 매수, 시장확장 착수

일본의 종합무역상사인 니찌멘은 프랑스의 최대 농약생산업체인 다리아그룹의 주식 81%를 매입함으로써 이 그룹의 프랑스, 스페인, 서아프리카 등에 이르는 생산·판매망을 손에 넣게 됐다.

다리아그룹은 프랑스의 농약생산업체인 카리오쁘를 주축으로 한 회사이다. 니찌멘은 94년 2월에 이 회사의 주식 34%를 매수한 이후 이번에 47%의 주식을 추가 매입함으로써 유럽에서 유력한 농약판매의 거점망을 확보하고 모로코, 세네갈 등 서아프리카 전역에도 튼튼한 판매망을 갖게 되었다.

다리아는 EU의 주요 농약시장인 프랑스의 거대 농약 제조그룹이다. 이 그룹 산하에는 카리오쁘사가 출자한 10개 이상의 제조·판매사가 있으며 그 거점망은 스페인 등 유럽권에서 아프리카까지 미친다. 니찌멘은 94년에 유럽지역에 농약판매 거점망 구축을 시작으로 다리아에 자본을 투자, 동구권 등에도 농약판매를 강화해 왔다. 더우기 이번에 경영권을 획득함으로써 유럽시장에서 판매기반을 견고하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다리아·카리오쁘그룹의 계열사로 유럽에는 NPP(프랑스, 천연농약개발·생산), 디아니카(프랑스, 농약판매), 가리베르(스페인, 농약판매) 등의 여러 출자회사가 있고 서아프리카권에서는 카리모로코(모로코, 농약판매), SPIA(세네갈, 생산, 판매) 등이 있는데 앞으로 이 회사들은 니찌멘 산하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니찌멘은 동구권의 폴란드에도 100% 출자한 농약판매회사인 NM아그로를 설립했고 금후에는 체코, 헝가리에도 진출할 계획이어서 유럽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시장에서 판매전략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식량·환경과 자유무역의 조화' 올 하반기 국제회의의 다수 개최

식량과 환경을 주제로 한 여러 국제회의들이 올 하반기에 개최된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11월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계식량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9월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농업의 환경보전 효과를 주제로 이례적인 심포지엄을 갖는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처음으로 각료회의를 12월에 계획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도 식량문제를 중심으로 실무차원의 검토에 착수했다.

각각 자유무역과 식량, 환경과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회의들의 논의의 방향은 미묘하지만 장래의 인구문제는 물론 최근 곡물시장의 가격상승 등으로 불가피한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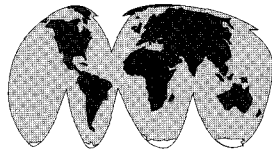
WTO

식량·환경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WTO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제1회 각료회의를 열어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문제에 관하여는 『무역환경위원회』에서 실무단계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는 다국간의 조화로운 환경협정과 무역질서를 만드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협정이 체결되면 차후에 미칠 무역 제한에 대한 염려 때문에 더 이상은 양보하지 않으려는 자유무역국가들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FAO

WTO는 무역상들의 모임일뿐 자유무역노선의 변경에는 소극적이다. 이 흐름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기대가



해외농약뉴스

결집되어 11월에 로마에서 FAO 세계식량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FAO의 목적은 세계의 기아근절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과 자금협력인데 이것을 이번 정상회의의 근본 주제로 삼고있다. 다만 FAO 사무국이 지난 3월 정상회의를 향해 표명한 정책성명에서 "식량불안은 선진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식량 안전보장을 위한 대책모색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주목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국제곡물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경제력이 약한 수입국에서는 충분한 식량조달이 어렵고 기아의 심화가 염려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상회의에 대한 기본입장은 "곡물의 재고감소와 가격상승은 극히 단기적인 현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합의에 따른 결과는 아니며 자국의 식량안전 보장을 실현할 목적으로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정책을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무역질서 확립에 깊이 참여하지 않고있다. 또한 미국은 개발도상국 지원에도 난색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기아해소 정책에 대해서도 안을 내지 않고있다.

한편 일본을 중심으로 국내생산을 중요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나라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 WTO 무역질서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OECD

환경문제에서 최근 선구적 역할을 하고있는 것은 선진국가의 모임인 OECD이다. 「무역과 환경」 「농업과 환경」 등 여러 토론에서도 "적절한 환경정책이 있으면 자유무역은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도출되었다.

9월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심포지엄에서는 농업이 국토보전과 경관 등에 미치는 플러스 측면의 내용을 주제로 하고있어 농업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인식 전환이 기대되고 있다.

APEC

APEC은 지난 5월 식량문제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앞으로는 지역내 식량수급에 대한 분석작업을 하고있다. 2-3년간은 이 작업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는 농산물 무역질서에도 참여하게 된다. 올해 의장국인 필리핀의 라모스 대통령도 식량문제에 관심이 높아서 올가을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식량 부족인구의 3분의 2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APEC의 정책이 식량문제에 커다란 열쇠를 가지고 있다.

식량생산 75% 더 늘려야

UN보고서 2050년 전망

국제연합(UN) 산하의 식량농업기구(FAO)와 인구기금(UNFPA)은 지난 7월 21일 보고서에서 「세계의 인구는 1995년의 57억에서 2050년까지 72% 증가한 98억명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식량도 75%를 더 증산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이 2050년까지 300%로 가장 높은 비율의 식량증산이 필요하며 다음으로 중남미 80%, 아시아 69%, 북미 30%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럽만 식량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심각한 식량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들로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나라들 외에도 아프카니스탄과 네팔, 몽골 등을 들 수 있으며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국민들도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세계식량정상회의」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농약정보**